



거창군의회는 12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거창군의회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청와대 등 보내기로

거창군의회는 12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결의안'을 11명 군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인 희생자 배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 사건은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것으로 당시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희생자들이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원하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이태현기자 2010800@gndamin.com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조속히 하라”



거창군의회는 12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거창군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과거 청산 필수·시대적 사명

거창군의회는 12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결의안'을 11명 군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은 더 늦출 수 없는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인 희생자 배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 사건은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것으로 당시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희생

자들이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원하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이우진 기자

거창군의회,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제239회 임시회 개최...조례안 등 22안건 심사·5분자유발언

거창군의회(의장 이흥희)는 12일부터 18일까지 거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개회식 후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신재화 의원은 개방화장실도 공중화장실처럼 다양한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관리를 강화해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했고, 최정환 의원은 골칫덩이로 전락한 폐고를 단장해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 밖에도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차원의 조속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 후 주요일정으로 13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보고의 건 등 총 22건의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14일과 15일 양일간에는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의안의 확정과 함께 임시회는 마무리된다.

이흥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발전 전에 비해 취약한 민생을 살피고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 군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거창법조타운이 조속히 최종방향을 찾아 군의 행정을 낭비하지 않고, 거창국제연극제도 정상화를 위해 산적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의 역량을 집중시키자"고 당부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인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조치를 위해 국회차원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흥희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거창양민학살사건은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당시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 희생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 밝혀졌지만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은 과거사에 대한 피해구조



거창군의회는 12일 제23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군의회는 이날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와 국회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의 유족에 대한 배상 조치는 전무한 상태로 남아있다"면서 "이런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치유하는 것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몫이며,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이런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거창군의회는 현재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이고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임을 절감하고 △정부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국회는 현재의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거창양민학살사건 배상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라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 하라는 등 내용으로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의장,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및 위원 등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장명익기자



거창군의회가 12일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거창군의회/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이뤄져야”

군의회,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청와대 등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거창군의회는 12일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상 조치를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흥희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군의원은 “거창양민학살사건은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당시 군 명령권자와 명령 수행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 희생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음이 밝혀졌는데도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피

해자 권리장전’은 과거사에 대한 피해 구조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배상 조치는 전무한 상태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창군의회는 현재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이고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임을 절감하고 “정부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국회는 현재의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거창양민학살사건 배상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라”,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하라” 등의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의장,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및 위원 등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